

여성정책 국내동향



2025년 6월 1차



한국여성정책연구원
Korean Women's Development Institute



주요 현안

여성가족부, 「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」 결과 발표

🔍 여성가족부는 6월 5일(목) 청소년과 성인 총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「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」 결과를 발표함.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정도를 파악하여 사회통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.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.

- 연령대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 높으며,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9년 만에 상승했으나 청소년은 하락

* 성인 : 20대 55.44점 > 30대 54.75점 > 40대 53.54점 > 50대 53.11점 > 60대 이상 51.14점
청소년 : 중학생 71.00점 > 고등학생 68.52점

- 접촉·교류 경험이 수용성 높여...다문화 '교육'보다 '활동'이 효과적

<(성인) 다문화 교육·활동의 참여율 및 다문화수용성>

참여유형	다문화교육+활동	다문화교육만	다문화활동만	모두 미참여
참여율(%)	4	10	4.3	81.7
다문화수용성(점)	63.33	54.67	59.15	52.43

- '이주민 증가는 인력난 등에 도움'(국민 10명 중 7명) 된다고 인식하는 등 긍정적 인식 높아

참고자료

- [여성가족부 보도자료, 2025.06.05.]
https://www.mogef.go.kr/nw/rpd/nw_rpd_s001d.do?mid=news405&bbtSn=710535

여성가족부, 「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」 결과 발표

🔍 여성가족부는 6월 9일(월) 「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」 결과를 발표함. 실태조사는 「양성평등 기본법」 제32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실태조사로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.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.

- (성희롱 피해) 지난 3년간의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4.3%로 '21년보다 0.5%p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경향

* 성희롱 피해 경험률 : ('18) 8.1% → ('21) 4.8% → ('24) 4.3%

- (2차 피해) 성희롱 피해자의 12.3%는 2차 피해를 경험하였으며, '21년 20.7%보다 8.4%p 감소함.

- (성희롱 방지 체계) 성희롱 방지 업무(예방지침, 고충상담창구 등)와 관련한 인지도, 고충상담창구 등에 대한 이용 의향, 공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기대가 '21년 대비 상승

- (정책 수요)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'피해자 보호',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'성희롱 예방교육 강화'라고 가장 많이 응답

참고자료

- [여성가족부 보도자료, 2025.06.09.]
https://www.mogef.go.kr/nw/rpd/nw_rpd_s001d.do?sessionid=awxlZEHXzozRBLyoZp6ZE9DK.mogef21?mid=news405&bbtSn=710537

여성가족부, 청소년한부모에게 정책서비스 안내 의무화 안내

🔍 여성가족부는 6월 4일(수)부터 청소년한부모(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)에게 정책서비스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고 밝힘.

- 이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시행에 따른 조치임.
-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상황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4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수록한 '2025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'를 전국의 광역·기초자치단체 및 가족센터(244개소)에 배포할 예정임.

참고자료

- [여성가족부 보도자료, 2025.06.03.]
https://www.mogef.go.kr/nw/rpd/nw_rpd_s001d.do?mid=news405&bbtSn=710534

교육부·고용노동부,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20개 사업장 명단 공표

🔍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(토)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함.

-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,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,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.9%로,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* 1,643개소 중 1,08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**을 통해 총 1,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함.
*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
**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%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 지원
- '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'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(100개소) 중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*에 해당되는 80개 사업장을 제외하고, 20개 사업장은 명단을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
* 공표 제외 사유: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,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,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
-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(명단 공표 20개+명단 공표 제외 80개)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.

참고자료

- [고용노동부 보도자료, 2025.06.01.]
https://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7888

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,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

🔍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9일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분야 주요정책 추진현황,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2024년 추진실적 평가결과,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, 노인빈곤 현황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에 대한 시사점,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 발전거점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함.

- 특히, 육아휴직, 경력단절여성, 난임치료휴가 등 결혼·출산·육아 등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법령·생활 용어 정비 추진 → 6월 중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예정임.
- '24년 시행계획 내 중앙부처 평가결과를 논의하고, '25년 시행계획은 저출생 직결과제 중심으로 확정 예정함.
- 치매 발병 이전단계에서는 ①고령자(예 : 65세) 대상으로 정부차원 교육·안내하는 방안, ②치매 환자의 의료간병 등 전문적 생활지원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신탁제도 개선 등 검토하고, 치매 발병 이후에는 ①전문성을 지닌 성년 후견인이 치매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치매 공공후견과 민간후견을 확대하는 방안, ②전문적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후견제도와 민간신탁을 연계하는 방안, ③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직접 신탁제도를 도입 등 검토함.

참고자료

- [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, 2025.05.29.]
<https://www.betterfuture.go.kr/front/notificationSpace/pressReleaseDetail.do?articleId=481&listLen=10&searchKeyword=&position=M>



여성관련 법안 동향

출처 : 국회의안정보시스템 <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MooringBill.do>

구분	계류법안(발의자)	제안일	내용
가족·저출생	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등 12인)	25.06.11.	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. 또한 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, 사례 분석을 지원할 검토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8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등).



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

• 연구결과/행사내용 관련

과제/행사명	날짜	매체명	제목	기사링크
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	25.06.05.	연합뉴스	국민 10명중 7명 “이주민과 통합 필요”...과반은 ‘정책부족’ 평가	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50604165400371?input=1195m
		YTN	국민 73% “이주민과 통합 필요”...현실은 “정책 부족”	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6051339386413
		한겨레	중·고생 92% “주변에 이주배경 또래 존재”... 자주 만날수록 포용력 커	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1201304.html
		세계일보	청소년 다문화 수용성, 조사 이래 첫 후퇴... 이유는?	https://www.segye.com/newsView/20250605511918?OutUrl=naver
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	25.06.09.	세계일보	직장 내 성희롱 당해도 75%가 ‘참고 넘어간다’... 8.5%p 증가	https://www.segye.com/newsView/20250609505097?OutUrl=naver
		이데일리	숨 막히는 젠지..세대갈등 심각한데 젠더갈등까지	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1859766642200408&mediaCodeNo=257&OutLnkChk=Y
입법 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구	25.06.01.	세계일보	입법공백 틈타... ‘임신중지 수술비’ 올린 병원들	https://www.segye.com/newsView/20250601508329?OutUrl=naver
		KBC 광주방송	“낙태죄 무효화 후 임신 중지 비용 늘어난 듯”.. 대체 입법 시급	https://news.ikbc.co.kr/article/view/kbc202506010050
25.06.02.	뉴스스	불법도 합법도 아닌 ‘낙태’...입법 공백에 임신중단 비용 부담 ↑	https://www.newsis.com/view/NISX20250602_0003198593	
	성별임금격차의 본질과 해결과제	여성신문	25.06.09.	“성별 임금격차 해법, 구조에서 찾는다”
25.06.10.			부동의 성별임금격차 1위 한국... “성평등목표제 도입해야”	https://www.women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63430
혼인 출산 관련 인식 심층 연구	25.06.01.	경인일보	‘사실혼’ 입증돼야 적극 개입... 가정폭력 사각, 이유 있었다	https://www.kyeongin.com/article/1741539
2023년 일·가정 양립 실태조사	25.06.11.	세계일보	“제도 자체 몰라” “눈치 보여”... 있어도 못쓰는 ‘근로시간단축’	https://www.segye.com/newsView/20250611516229?OutUrl=naver



미성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적극 검토해야(국회입법조사처)

🔍 13세 이상 미성년 친족성폭력 범죄에까지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살펴보고 입법 개선 방향을 제안함.

- 미성년 친족성폭력은 가족 내 권력관계와 심리적 압박 등으로 인해 피해 신고와 상담이 오랜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. 그러나 현행법은 13세 미만 피해자에게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방치됨.
-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, 국내에서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음.
-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민사 소멸시효 개정이 필요함.

참고자료

- [국회입법조사처, 이슈와논점 2370호, 2025. 06. 10.]
<https://www.nars.go.kr/report/view.do?cmsCode=CM0018&brdSeq=47691>

초고령사회의 의료와 돌봄의 지속가능성(국회입법조사처)

🔍 국회입법조사처는 「미래 보건의료 방향과 과제」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함. 이번 간담회는 ‘초고령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효율성을 기반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’이 논의됨. 논의된 개편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의료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질환 위중도나 필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비율의 급여율을 적용하는 ‘수평적 보편성’을 추구해온 현행 건강보장 체계를 ‘수직적 보편성’을 추구하는 건강보장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
- ‘사회보험과 재정사업’ 중심의 현행 요양·돌봄 보장 체계를 ‘의료·돌봄 통합 자원’ 체계로 전환하면서,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국고보조 확대, 특수목적세 도입 등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

참고자료

- [국회입법조사처, NARS 브리프, 2025. 06. 05.]
<https://www.nars.go.kr/report/view.do?cmsCode=CM0043&brdSeq=47677>